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7대 제안 받아들여야…결의안 통과도”

민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망공 “정부·여당, 더 늦기 전에 7대 제안들 받아야” “내일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 통과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원전 오염수 특위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수산물 방사능검사 확대 조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를 거부한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며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여당과 협의

하겠다. 동시에 국회 검증특위와 청문회 실시를 관철하도록 여당과 끈기있게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류 철회에 반대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 내지 찬성하나. 당신들이 2021년도, 2년 전에 냈던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문은 도대체 뭐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전 회집을 돌며 안전하다고 ‘먹방쇼’를 하는데 아직 방류 전이다. 시계가 고장났나 아니면 뇌가 고장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정부 당국자는 응당 대한민국 국익,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IAEA 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중보고서 제출 이후 국회 특위와 청문회 진행해야 한다며 IAEA 보고서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 반대할 것이라고 한

다”며 “IAEA 보고서대로 따라갈 거면 국회특위 왜 구성하고 청문회는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직격했다.

변용일기자

이낙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DJ는 제 정치의 원점”

文 전 대통령, 봉하마을도 방문할 듯...구체일정은 아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 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DJ묘역에 도착, 민주당 설훈·윤영찬 의원과 함께 참배했다.

묘역 옆에는 ‘제45대 국무총리 이낙연’이라고 적힌 화환과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보낸

꽃다발 등이 위치했다.

이 전 대표는 분향 후 약 30초 동안 꿇고 묵념을 했다. 이후 묘역 앞에서 설훈, 윤영찬 의원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대표는 뭔가 설명하듯 손짓하며 말했고, 두 의원은 이 전 대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이 전 대표 측근들은 그가 현충원 참배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봉하마을 등 방문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묘역 참배로 이 전 대표가 국내 정치 복귀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을 방문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DJ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다. 그래서 1년 전 출국할 때 여기 와서 출국 인사드렸던 것처럼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선 “우선 인사드릴 곳은 인사드릴 것이다. 현재는 거기까지 (행보를) 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두되고 있는 역할론에 대한 입장, 입국 시 ‘뭇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의 구체적 의미 등을 묻자 답변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참배 일정 소화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서울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귀국보고를 드렸다. 귀국후 첫 공식일정”이라며 “김대중 정신은 제 정치의 원점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로운 시기,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이재명 대표 “교육은 범죄수사와 달라 사회적합의 거쳐 중장기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교육과정 밖 길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은 범죄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 땀집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며 “교육부가 길러문항을 제거하겠다고면서 3년 치 사례를 공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축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줄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조치도 운운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

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취약계층 상황 유예조치, 채무조정 조건의 완화 같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며 “벼랑 끝에 있는 민생을 구할 최중보루는 재정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MB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특보의 방송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